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‘통신3사간 담합 혐의’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주요 보도내용(한국경제, ‘24.10.31.)

- “‘단통법 담합’ 놓고 ... 공정위·과기부 충돌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,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아울러,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,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내용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>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,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.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‘통신 3사간 담합 혐의’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<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>

-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, 법 위반 여부 및 범위,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,
 -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부,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,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또한,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.

담당부서	공정거래위원회	카르텔조사국	책임자	팀 장	김중호 (044-200-4750)
		서비스카르텔조사팀	담당자	사무관	정용선 (044-200-4760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	통신정책관	책임자	과 장	심주섭 (044-202-6650)
		통신이용제도과	담당자	사무관	신재우 (044-202-6657)

